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5월 국회 첫 '분수령'

국회, 이달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유지 특별법 처리
제주도, 강원특별법 연계 협력 제주특별법 통과 주력
법 개정 실패시엔 주민투표법 근거해 주민투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이달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행정부 장관에게 제주특별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 제10조에는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22년 3월 14일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월 국회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가 국회의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요청을 받은 행정부 장관은 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오는 6월 11일 출범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와도 협력을 강화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도와 유사하게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현행 행정시 체제를 유지해도 된다는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시·군을 폐지한 제주자치도와 달리 시·군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주특별법 개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근거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이것을 근거로 행정부 장관에게 제주특별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달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과 연계해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만약 제주특별법 개정이 안되면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부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방큰돌고래들의 유영 비가 그친 8일 남방큰돌고래 한 무리가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에서 여유롭게 유영하고 있다. 해안가를 찾은 관광객들이 돌고래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강희만기자

기후변화·15분도시 연계 도시숲 확대

제주도 올해 2년차 사업 148억 투입 120만그루 식재
제주시 교래·서귀포시 상천리 상수리나무 대체 조림

제주특별자치도의 '6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도시숲 조성 및 삼나무 수종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추진 중이다. 특히 도는 미세먼지와 폭염, 도시열섬화 등 기후변화 대비는 물론 '15분 도시'와 연계한 제주 지형·여건에 맞는 도시숲 조성사업 확대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8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난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사업비는 663억원(국비 264.도비 399)이다. 올해 2년차 사업은 예산 148억원을 투입해 120만그루의 나무를 식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도는 도시숲 공간을 넓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또 도시 외곽 산림의 건강성과 경관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공익조림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 녹화운동을 확대한다.

사업량은 공공부문의 ▷도시숲 228만5000그루 ▷도시공원 23만 1000그루 ▷공익 조림 65만그루 ▷가로수 2000그루 ▷도시 참여 도시 녹화 97만8000그루와 함께 민간부문(공기관 포함)의 각종 관광산업, 택지 조성, 신축 등에 따른 185만 4000그루 등이다.

도는 도시숲 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 녹화, 삼나무 수종 갱신 등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도시열섬화를 막아주는 도시바람길숲을 비롯해 녹색점자

숲, 기후변화대응숲 조성과 삼나무 수종 갱신 나무심기에 주력한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등 삼나무 숲 18ha에 대해 상수리나무로 수종을 갱신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에 앞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미래의 숲 조성사업을 벌여 1734ha에 132만5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 기간에 2만8256ha 규모의 도시녹색공간 조성 사업도 추진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생태 복원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645ha에 15만3000본의 나무를 식재했다. 여기에 도시숲 169ha, 학교숲 34개교, 미세먼지 저감 도시바람길숲 114ha 등을 조성하고 가로수 7만3084본을 심어 도민이 행복한 제주숲 만들기에 나섰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재외동포청 인천으로
통합민원실은 광화문
유치 실패 제주 '허탈'

재외동포재단이 내달 청으로 승격·출범하면서 제주를 떠나게 됐다. 정부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치하기로 확정하면서다.

외교부는 "인천을 재외동포청 본청 소재지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본청은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전담 기구이다. 오는 6월 5일 공식 출범하게 되면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는 첫 청급 기관이 된다.

재외동포청 유치에는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를 비롯해 인천, 서울 등 지자체가 뛰어들어 경쟁해 왔다. 이 중에서 인천이 최종 소재지로 결정된 것은 접근성, 상징성, 지방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본청을 인천에 두면서도, 통합민원실을 서울에 설치하기로 한 데에는 외교당국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치 경쟁을 벌여 왔던 제주로서는 상실감을 안게 됐다. 그동안 제주에선 50여 개 자생단체가 '재외동포청 제주 서귀포 사수 범도민 운동본부'를 꾸려 '이전 반대' 활동을 벌여 왔다.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원 등도 재외동포청의 제주 배치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제주로서는 새로운 공공기관 유치에 더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최근 한 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10곳을 '유치 집중' 기관으로 분류하고 유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여수 광양항에 제주물류전진기지... 3면 / 수협 유통사료에 금지약물... 4면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를 찾습니다

제주4·3사건(1947년 3월 1일 ~ 1954년 9월 21일) 당시 2차례의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은 2,530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청구 추진을 위하여 수형인명부에 기록된 희생자들을 찾고 있으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자 명단

<제주읍>

강승국康承國
조기홍趙基弘(내도)
강정수姜貞洙(노형)
고순기高順起(노형)
김재규金在奎(노형)
문태희文泰熙(노형)
양진옥梁珍玉(노형)
박태언朴太彦(노형)
현인표玄仁杓(노형)
고기우高棋宇(도두)
박옥선朴玉善(도두)
안선화安善花(삼도)

정창립鄭昌立(삼양)
김봉추金鳳秋(아라)
진병규陳秉奎(아라)
김시종金時宗(영평)
김영순金永順(영평)
부운선夫云善(오등)
강천중康千宗(오라)
박제식朴濟湜(오라)
이태준李泰俊(오라)
정鄭/유순여劉順如(용강)
김의봉金義奉(이도)
김전중金天中(이도)
이봉하李奉河(이도)
진경수秦景洙(이도)

김광수金光水(일도)
김용생金乙生(일도)
고일순高日順(해안)
김택지金澤智(해안)
송두옥宋斗玉(해안)
김두길金斗吉(화북)
안상준安相準(화북)
유대인俞大仁(화북)
김진현金辰鉉(화북)
강태오姜泰五(회천)
<조천면>
김용생金龍生(대흘)
고재훈高在訓(선흘)
홍옥례洪玉禮(선흘)

이석우李錫雨(신안)
김태옥金太玉(와산)
안동군安東君(와산)
강봉원姜奉元(와흘)
신오봉申五奉(와흘)
김중인金鍾仁(조천)
김대우金大祐(조천)
이윤정李允貞(조천)
한갑생韓甲生(조천)
김동민金東旻(함덕)
<애월면>
강평기姜平基(상귀)
강규인姜奎仁(어도)

김명생金明生(어음)
안세홍安世洪(어음)
<한림면>
고시천高時千(금악)
양태호梁泰鎬(동명)
김병호金秉鎬(명월)
<추자면>
이영식李永植
<서귀면>
오근보吳君補(동홍)
오택표吳泰杓(동홍)
고익광高義光(상호)
김명종金明鍾(상호)

오중화吳宗化(서귀)
문복남文福南(중문)
<대정면>
이원석李元石(무릉)
강상근姜尙根(신평)
송윤옥宋允玉(영락)
<남원면>
강주진康潤珍(남원)
현영일玄英一(남원)
홍창부洪昌富(남원)
조병식趙柄植(신에)
이경화李京花(의귀)
정명순鄭明順(의귀)
강태욱康泰旭(태홍)

<안덕면>
강문송姜文松(상천)
오봉준吳奉春(서광)
<성산면>
김춘생金春生(신풍)
<표선면>
김경선金庚善(가시)
김우규金禹奎(가시)
김인보金仁保/김인(가시)
김영삼金永三/김화(초삼)
가시)
오용주吳容柱(가시)
문창생文昌生(표선)

<도 외>
김동식金東植
(경상북도 의성군)
노영근盧永根
(전라남도 함평군)
정창근鄭昌根
(전라남도 함평군)
오자현吳子現
(충청북도)
이윤주李潤周
(충청북도 단양군)
김중진金仲鎭
(평안북도 구성군)

□ 기 간 연중 □ 대 상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4·3사건으로 인한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찾지 못한 희생자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 82)064-710-8442~4, 8458 □ 우편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4·3지원과 (우편번호) 63122

◎ 본 명단은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상 기록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이름과 지역 등 기초자료가 실제 인물과 상이할 수 있음 ◎